

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

2021. 9. 16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우리의 식량 공급-소비체계 진단	2
III.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향 및 과제	4
1. 식량안보 강화	5
2. 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	10
3. 먹거리 접근성 보장	14
4. 추진 기반	18
[부 록] 과제별 관계부처	19

I. 추진 배경

◇ 먹거리는 생존의 필수 요소이며,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

□ '먹거리'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**환경·건강·안전 등 다양한 이슈와 연관**

○ 최근 **코로나19** 확산에 따른 국가간 물류 차질 발생, 수출 제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**식량안보 위기의식 고조**

* 그간 곡물 위기는 기상에 따른 생산 차질, 신흥국의 급격한 수요 증가 등 수급 측면에서 발생하였으나 전염병 확산 등 새로운 위험 요인 등장

○ 또한, 먹거리 생산-소비 과정에서 **환경부담 발생, 소득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영양·건강 불균형*** 등도 먹거리 시스템에서 개선할 과제

* 소득수준별 식품안전성 미확보가구 비중(국민건강영양조사 '19) : 소득 상 0% 중 0.6% 하 13.0%

◇ 국제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먹거리 시스템 전환이 중요하다고 인식

□ **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** 달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, 코로나19·기후변화 등으로 **세계 식량불안, 기아, 영양 불균형 등 문제는 오히려 심화***

* UN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로 빈곤·기아 종식, 기후변화 대응 등 총 17개의 '지속가능발전목표'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, SDGs) 제시('15)

** 세계 기아인구: ('19) 6.9억명→('20) 8.1(전체 인구의 9.9%), 성장지연 아동 ('19) 1.4억명→('20) 1.5

○ **UN은**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푸드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, UN총회 계기에 **푸드시스템 정상회의** 개최 예정(9.23일)

* 각 회원국별로 국내 논의(national dialogues)를 진행하고, 먹거리시스템 전환방안 마련 요청

◇ 먹거리 공급·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,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인 '국가식량계획' 마련 필요

* 문재인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('17.7.) 제시, 수 차례 대외 정책의지 표명('19.12.12 타운홀미팅 보고대회, '20.11.11 농업인의 날 등)

II. 우리의 식량 공급-소비체계 진단

[1] 식량 공급 체계

□ 우리나라는 쌀 이외 밀·콩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국제시장 여건에 국내 수급을 상당 부분 의존

○ **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장애** 등 새로운 불안 대응에 한계가 있고, **국제 곡물가격 상승에도 취약한 구조**



□ 식량을 공급하는 농지, 농어업 인력 등 주요 생산요소는 **산업화·도시화, 고령화** 등의 영향으로 활용 여력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

* 경지면적 ('90) 2,109천ha→('19) 1,581, '20년 농림어가경영주 평균연령 65.9세

□ 국가 전체 자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내 농산물의 생산·가공·소비간 연계가 부족하여 **지역단위 자급률 제고에 한계**

[2] 기후변화와 환경 측면에서 먹거리 생산과 소비

□ 농어업 생산은 기후 변화*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,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**농어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**해야 하는 상황

* 한반도 기온 상승폭은 지구 평균의 2배 수준(지구 평균 0.85°C, 한반도 1.8°C)

배출량 (백만톤 CO2eq)	비에너지				에너지
	계	경 중		축 산	
		벼재배	농경지토양	장내발효·분뇨	
28.5	20.4	6.0	5.8	8.6	8.1

□ 먹거리를 생산-소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부담 요인 발생

- 화학비료 사용량은 감소 추세이나, 적정 시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

* 비료 사용량 : ('00) 381.4kg/ha→ ('19) 268.0(OECD 평균 대비 질소 3.4배, 인 8.6배)
가축분뇨 발생량 : ('00) 4,566만톤→ ('10) 4,953→ ('19) 5,592

- 외식,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

*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(만톤/년) : ('00) 417→ ('10) 499→ ('19) 52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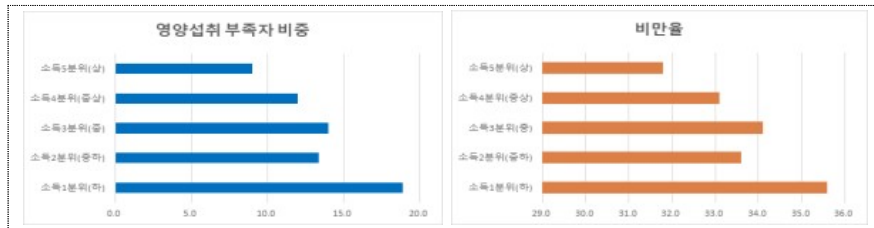
- 친환경 농업*은 최근 정책 추세이며, 소규모·분산된 생산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,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판로 확대 한계

*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: ('15) 75,139ha→ ('17) 80,114→ ('19) 81,717→ ('20) 81,827

[3] 먹거리 접근성

-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일수록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과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소득 계층별 영양·건강 불균형이 심화

< 국민건강영양조사('19년, %) >



-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나라의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

* 저소득층 대상 우유급식, 정부양곡 할인 등을 지원 중이며, 그 외 농식품 바우처('19~),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('18~),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('20~) 지원은 아직 시범사업 단계

-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균형 있고 건강한 식생활 영위가 중요하며,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

- '19년 농산물은 농약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

* 농산물 PLS : ('16.12.31일 시행) 건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, ('19.1.1일 시행) 전체 농산물

- 다만, 축산물·수산물 위해예방 강화, 수입농산물 이력 관리 이원화(관세청, 농식품부)에 따른 부정유통 관리 미흡 등은 보완할 과제

Ⅲ.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향 및 과제

비전

지속가능한 식량 생산-소비 시스템 구축

3대 전략 및

9개 중점 과제

전략1: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

- ①(위기 대응력 강화) 비축제도 개선, 해외 공급망 확보, 국제협력 강화
- ②(공급 기반 확보) 밀·콩 생산단지 구축, 농지·인력 등 생산요소 관리
- ③(지역단위 자급력) 로컬푸드에 기반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·확산

전략2: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·소비

- ④(친환경 생산·소비)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육성,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
- ⑤(기후변화 대응) 기후변화 정보 제공,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
- ⑥(탄소중립 실천) 농어업분야 탄소배출 저감, 신재생에너지 확산

전략3: 먹거리 접근성 보장

- ⑦(먹거리 통합지원) 저소득층 대상 최소한의 먹거리 지원
- ⑧(건강·영양 개선) 식생활 교육 강화, 영양정보 DB 구축·활용
- ⑨(농식품 안전관리) PLS 정착·확대, 수입농식품 안전관리 강화

추진 기반

법적 근거 + 기본 계획 + 민관협업체 운영

기대 효과

- ◇ 밀·콩 자급률 : [19] 0.7% / 26.7%→ [25] 5.0 / 33.0
- ◇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: [18] 20.1백만톤→ [30] 19.0
- ◇ 소득 1-5분위 식품안정성 격차 : [18] 11.4%p→ [30] 7.0

* 식품안정성: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의 식품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

[1] 식량안보 강화 :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

[주요 지표]

주요 세부 과제별 현재 상황		미래 모습	
지 표	'20년	'21년	'25년
■ 주요 품목 비축매입물량 확대	쌀 350천톤 밀 3천톤 콩 17천톤	쌀 350천톤 밀 10천톤 콩 25천톤	쌀 450천톤('22) 밀 30천톤 콩 60천톤
■ 밀·콩 자급률	0.7%/26.7% ('19)	1.7%/30.9%	5.0%/33.0%
■ 공공임대용 농지 비축(누계)	8,719ha	10,671ha	19,000ha
■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	91개	111개	150개

※ 향후 과제별 목표는 가격 등 시장상황·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

[추진 전략]

F4 주요 곡물인 쌀·밀·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*하고, 국제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대비

* 쌀/밀/콩 공공비축 매입 물량(천톤) : ('20) 350/3/ 17→ ('22) 450/14/25

■ (민간기업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 사례) 펜오션은 미국 EGT 곡물터미널 지분 투자(36.25%, 60백만달러)를 통해 밀, 옥수수, 대두 등 곡물유통사업 추진('20.9월 인수 완료, 연간 900만톤 선적 규모), '21년 농협사료에 사료용 곡물 47만톤 공급 예정

F5 밀·콩 생산단지 조성·확대, 수요처 발굴로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

F6 농지·인력 등 주요 생산요소 확보를 위해 적정 농지 확보계획 수립('22),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·비축 확대, 청년농 영농정착 패키지 지원 확대 등 추진

F7 지역 푸드플랜 수립·확산·성숙 등 단계별 지원으로 지역 내 자급력 확보

■ (지자체 푸드플랜 우수 사례) 전북 완주군은 지역 푸드플랜을 적극 수립·시행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(12개소) 매출액('15: 41,435백만원→ '20: 59,346), 공공급식지원센터 매출액('15: 2,772백만원→ '20: 7,977)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가소득 증대,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 등 효과

1-① 위기 대응력 강화

□ (비축제도) 쌀·밀·콩 등 주요 곡물 중심으로 국내 비축을 확대하여 유사시 대응 역량 제고

○ 쌀은 생산량이 감소해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'22년 공공비축 매입량을 45만톤으로 확대(현행 35만톤)하고, 매년 점검·보완

* '20년 잦은 강우, 3차례 태풍 등으로 쌀 351만톤 생산('19년 대비 △23만톤, △6.3%), 수급안정을 위해 31만톤 정부양곡 시장 공급, 정부 공급 여력 보강 필요

○ 밀은 생산기반 확충과 연계하여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비축물량 단계적 확대('20: 3천톤→ '22: 14)

* 국산 밀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 비축밀 공급 추진

○ 콩은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비축물량 확대('20: 17천톤→ '22: 25)

□ (해외곡물 불안 대응) 해외 곡물의 국내 안정적 반입을 위한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 지원, 국제협력 강화 등 추진

○ 국내 업계의 해외 주요국의 곡물 공급망 지분 확보 소요자금 일부 융자지원 및 투자환경, 인프라 등 사전조사* 지원 확대

* (현행) 사전조사·컨설팅 지원사업 규모는 연간 4억원 수준, 지원비율 50~70%

○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곡물의 가격불안 대응을 위해 평상시 일정액 기금을 적립하고, 가격 급등시 활용하는 방안 검토

* 축산 농가, 사료업계 부담 원칙 하에 일부 정부 지원, 세부방식은 관계자 협의·구체화

○ 주요 수출국 대상 수출규제 금지 촉구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, 식량원조*, ODA**를 통해 중견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영향력 제고

* 식량원조 현황 : APTERR 지원 17천톤('13~'20), WFP 지원 연 5만톤('18~'20)

** ODA 사업 현황('21) : 828억원, 13개국, 4개 국제기구, 45개 사업

1-② 국내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 확보

- (자급률 제고) 주요 곡물 전문 생산단지* 등 국내 인프라 확충, 원예·축산 의무자조금 도입을 통한 생산자 자율 수급관리 기반 강화
 - * 전문 생산단지 조성계획(개소, 누계) : ('20) 밀 27, 논콩 44→('21) 32, 100→('25) 50, 200
- (밀)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, 가공 적성을 고려한 품질 기준 마련('22), 대량 수요처 발굴 등 생산부터 유통·소비까지 단계별 지원
- (콩) 논콩 생산단지, 콩 종합 처리장 등 안정적인 콩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, 대량 수요처 계약재배 지원 등을 통한 수요처 발굴
- (원예) 산지의 자율수급조절 기능*을 강화하고, 수급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('21), 인공지능형 수급·가격 예측모형 개발('22) 등 관측 고도화
 - * 자조금 지원 확대('20: 91억원→'22:124), 채소가격안정제 확대('17~'20년 계약재배 농가 중 44%→'25년 50%)
- (축산) 수급 상황별 대응 매뉴얼 마련('21), 한우·돼지 중장기 수급전망 분석·제공, 수입 곡물 조사료 대체를 위한 국산 고품질 조사료 연중 공급체계* 마련
 - * 조사료 전문단지('20: 26천ha→'25: 32), 대형 발효시설 지원('22년 신규) 등 확대
- (자급기반 강화)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·인력 등 생산요소 확보
 - (농지) 적정 농지 확보계획*을 수립('22)하고, 농지정보 분석시스템 구축(신규(안), 47억원),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확대('20: 8,719ha→'22: 12,500, 누계)
 - * 우량농지 보전 강화, 농지 이용 활성화,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포함
 - (인력) 농업인력증가센터 확대('21: 130개소→'25: 150), 청년 농어촌정착 패키지 지원, 귀농·귀촌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('23), 외국인 기술사(인) 도입산(인), 42억원 10개소) 추진
 - * 자금(후계농 최대 3억원 청년농어민 월 최대 100만원), 농지(5년간 2ha 임대), 주거(주택 임대) 등
 - (용수) ICT,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·통합적 물관리 추진
 - * 용수관리자동화 : ('20) 총 27개 중 7개 지구 준공(26%) → ('25) 27지구 완료(100%)
 - (수산) 총허용어획량제도(TAC) 적용 대상 확대*로 수산자원 회복을 유도하고, 과밀·노후 양식장 재생사업('26년까지 20개 해역) 추진
 - * 연근해 어획량 TAC 적용 비율(%) : ('20) 29→('25) 50→('30) 80

1-③ 지역 내 생산-소비 체계 구축

- (지역 푸드플랜 수립) 지자체의 지역 푸드플랜* 수립·실행부터 확산·성숙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자급력 확보
 - * 지역 푸드플랜 추진 111개 지자체 중 생산 기반이 있어 지역 내 소비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은 90개소 수준, 이 중 11개소(전주완주나주 등)는 공공급식/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(확산 단계)
- (수립·실행) 실태조사, 실증연구 등을 지원하고, 전담 FD(Family Doctor)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 구축, 푸드플랜 수립 추진
 - * FD는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주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 진단, 컨설팅 등 실시
- (확산) 먹거리통합지원센터* 설립 확대('20: 22개소→'25: 40), 공동 구매·가공·판매 등을 통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 확대
 - *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농산물 구매(농가 조직화 포함), 통합 물류, 농가 가공 지원, 로컬푸드 시장 창출 등 지역 푸드플랜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
- (성숙)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외식업체에 로컬푸드 식자재를 공급하고, 로컬푸드 인증제(지역 자율) 확대 등으로 소비 확산
 - * 먹거리 거버넌스를 지역 내 외식업체까지 확대하고, 직매장을 복합기능화하여 소비 접점 확대 및 먹거리 사회적 가치 실현
- (지역 푸드플랜 확산) 로컬푸드 지수 활용, 관련사업 연계 지원, 공공기관·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 분위기 조성
 - 기획생산, 안전관리, 공공부문 참여, 일자리 창출 등을 지표로 지역별 로컬푸드 확산 성과를 평가하여 포상·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
 - 지자체의 푸드플랜 진행 단계(실행-확산-성숙),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·자금 등 연계사업 지원을 확대*하고, 거버넌스 운영지침 마련('22)
 - * ('20년까지) 17개소, 835억원 지원(지방이양사업 포함)→('25년까지) 30개소 추가 지원
 -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및 지역 거점 대학, 주요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등 푸드플랜 참여 독려
 - * 공공급식 공급망 확대('21/22): ①혁신도시 공공기관(6개소/2), ②정부청사(세종대전/소속기관)

< 지역 푸드플랜 지원 체계 >

단계	지원 방안	추진/지원 현황
수립·실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푸드플랜 수립 지원 - 지역 먹거리 실태조사, 거버넌스 구성·운영 및 정책과제 도출 등 푸드플랜 수립, 실증 연구 등 - 개소당 국비 50백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총 71개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지원 - 서대문구, 청양, 완주, 나주, 이천 포함 15개소 수립 완료 * ('18) 9개소→('19) 23→('20) 18→('21) 21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- 물류 시설 등 푸드플랜 실행에 필요한 관련 농림사업 포괄 지원 - 패키지지원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담 전문가 현장 자문 - 총 16개 사업(지방이양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7개 지자체와 먹거리계획 협약 체결 - (화성) '19년 저온유통시설, 안전 분석실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푸드플랜 실행 기반 구축 - (군산)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, 운영, 조례 등 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 자문으로 조례 제정 완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- 농산물 직거래 공간 제공을 위한 직매장 건축 비용 지원 - 개소당 국비 300백만원 한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1년 기준 총 134개 직매장 설치 지원 - 세종, 완주, 고양 등 매장에서 연간 50억 이상 매출액 달성(25개소) * 매출액 ('16) 1,442억원→('18) 2,404→('20) 3,590
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획생산체계구축 지원 - 공공급식, 직매장 등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체계 구축, 농가조직화 지원 - 개소당 국비 10백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총 33개 지자체 기획생산 구축 지원 - (진주) '20년 군납 출하농가 68농가, 혁신도시 출하농가 65농가 확대 - (해남) 공공급식 품목을 확대(10개→44), 학교급식 로컬푸드 비율 (51%→70), 147개 농가 조직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원 - 가공기기 설치, 상품개발연구기술, 창업 교육, 자문·컨설팅(가공기술 이전, 상품화, 창업 상담, 홍보 마케팅 등) 지원 - 2년간 10억원(국비5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96개 시·군 농업기술센터 설치 지원 * ('10) 4개소(누계)→('19) 86→('21) 96 (정선, 용인, 청주, 완주, 달성 등)
성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 - 먹거리통합센터를 통한 외식업체 식재료 공급 확대, 참여 외식업체 인센티브(인증제, 홍보 등)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완주, 춘천, 충남도 등 일부 지역에서 외식업체 로컬푸드 인증제 추진 * (완주) 주부재료의 지역농산물 비중 50% 이상, 현장심사 80점 지역농산물 사용 50점 이상인 업소 대상 3개 등급 인증(현재 28개소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로컬푸드복합센터 지원 - 직매장에 농가레스토랑, 로컬카페, 공유부엌 등 복합적 기능을 추가하여 먹거리 기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 - 개소당 국비 600백만원 한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1년 신규, 10개소 지원 * 고양, 태안, 부안, 익산, 김천, 구미, 울진, 남해, 합천, 함양 등에서 직매장 식재료를 활용한 농가레스토랑 및 소비자 참여 공간 등 조성 중

[2] 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 :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

[주요 지표]

주요 세부 과제별 현재 상황	
지 표	'20년
■ 농축수산물 온실가스 배출	204백만톤('17)
■ 화학비료 사용량	266kg/ha
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 비중	10%
■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	289품종
■ 친환경 농업 인증 비중	5.2%
■ 음식물류 폐기물	14,317톤/일('19)

미래 모습	
'21년	'25년
-	19.0백만톤('30)
261kg/ha	233kg/ha
11%	15%
303품종	363품종
5.9%	10.0%
-	12,885톤/일('30)

※ 향후 과제별 목표는 가격 등 시장상황·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

[추진 전략]

[F4] 친환경농업집적지구* 육성, 경축순환농업 활성화, 친환경 수산물 양식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생산 확대

*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 비의도적 오염 노출 최소화, 효율적 유통 등 친환경농업을 집중 수행하는 지구를 '친환경농업집적지구'로 지정(~'25년 72개소, 신규)

■ (경축순환농업 우수 사례) 논산계룡축협에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퇴비·액비·전기까지 생산, 퇴비·액비는 논산시 전역 논에 뿌리고 전기 생산으로 연간 4억원 수준 수익

- '94년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을 가동하여, '97년 액비화 성공, '11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, '16년 바이오가스 생산 등으로 하루 150톤의 분뇨·음식물 처리

[F5] 식품 소비기한표시제 도입, 가정·외식업체 배출 저감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축하고 바이오가스화 등 공공처리도 확대

[F6]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*하고 기후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('27)

* 기후적응형 품종개발: ('21) 303품종→ ('25) 363

[F7] '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'을 마련하고,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밀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

○ 적정시비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낮추고('20:266kg/ha→ '25:233), 가축 분뇨 정화·에너지화,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원에 확대 등 추진

2-① 환경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·소비 확대

- (친환경 농어업 확산)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육성, 경축순환농업 활성화, 친환경 양식 확대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 확대
 - 친환경농업지구 중 연접면적, 환경기준, 판로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 지정(~'25년 72개소, 신규), 단계별·맞춤형 지원체계 구축
 - * (예비지구) 지구 내 관행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→ (기초지구)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규모 확대→ (선도지구) 지구 중심의 생산·유통·소비 체계 구축
 -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경종-축산 순환 모델을 개발('22) 하고, 경축순환농업 시범지구 운영*(환경부 협업, 연간 3개소)
 - * 축산-경종간 연계를 통해 가축분 퇴액비 수요 확대, 퇴액비 활용 경종농가에 대한 교육·컨설팅, 퇴액비 기능 홍보 등 추진
 -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('21),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('22),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('26) 등으로 환경친화적 양식산업 육성
- (음식물 낭비 저감)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축·자원화하고, 캠페인을 통해 음식물 낭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(식약처·환경부 협업)
 - *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목표 : ('19) 14,317톤/일→ ('30) 12,885→ ('50) 7,158
 - 유통단계에서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한 '소비기한 표시제' 도입
 - * '23.1.1일 「식품표시광고법」 시행 유제품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8년 이내 유통기간 부여 소비가능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에 따른 손실은 연간 1조 규모(식품안전정보원 '21)
 - 바이오가스화 등 음식물 폐기물의 공공처리 비중을 확대*하고, 통합 에너지화시설 설치 등으로 광역 단위 처리 시스템 마련
 - * 공공 처리비중 : ('20) 49%→ ('23) 51→ ('24) 53→ ('25) 55
 - 음식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식문화 실천*교육을 추진하고, 가정, 급식, 외식업체 등 유형별 맞춤형 캠페인 지속 전개
 - * 식문화 실천과제(예시) : 조리과정에서 식재료 낭비 줄이기, 음식 남기지 않기

2-②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

- (기후변화 정보 제공) 농축수산물 부문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 강화
 - 관측위성 등을 활용하여 농업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, 기후변화 지표생물의 DB 구축('21: 12종→ '25: 28)
 -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재배적지 설정, 생산량 예측 기술 개발
 - * 재배적지 변동 예측(작물수) : ('21) 19종→ ('23) 22→ ('25) 25
 - 작물의 생육단계 추정 및 생육 맞춤형 재해위험 판정 기술 개발, 복잡지형에 최적화된 기상 추정기술 개발 및 공간정보 DB 구축
 - *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서비스 시스템 개발(작물 수) : ('21) 34종→ ('25) 44
- (기후적응 생산 강화) 기후적응형 재배기술·품종 개발 병충해 관리 강화
 - 기후적응형 품종개발('21: 303품종→ '25: 363), 주요 식량작물 폭염 대응 내열성 증진, 아열대 채소·과수 재배 등 연구 추진
 -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의 실태를 조사하여 취약성 평가 지도를 작성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대책 마련
 - * 병해충 민원처리 및 방제 지원건수 : ('21~'25) 연간 30건
- (생산환경 관리)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노력, 토양 및 수산물 생산 해역 환경관리 강화
 - 저지대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*, 농촌용수개발** 등을 통해 홍수·가뭄 대응 능력 강화
 - * 저지대 농경지 배수시설 : ('20) 19.4만ha(목표 대비 64.2%)→ ('30) 30.3만ha(100%)
 - ** 농촌용수 급수율 : ('20) 11.0만ha(목표 대비 80.3%)→ ('30) 13.6만ha(100%)
 - 농경지 토양의 침식 모니터링* 및 고령지 밭토양의 침식 경감기술 개발('25), 수산물(패류) 생산해역 보호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**
 - * 토양특성 강우를 고려 농경지 토양 유실량 산정→ OECD 농업환경지표 자료 제공(1회/2년)
 - ** 우선순위 71개소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확충: (~'21) 4개소→ ('25) 71개소

2-③ 농어업분야 탄소중립 실천

- (탄소중립 기반) 화학비료, 메탄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, 인증 등 제도적 기반 마련(10월 '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' 발표)
 - 경종농업은 적정 시비를 위한 양분관리제* 도입방안 마련(환경부 협업),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표시제 도입('25), 토양 진단 및 시비처방 의무화('30)
 - * '19년부터 홍성·군위 등에서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중, 타지역 확산 추진
 - 대규모 축산농가 분뇨 정화처리시설 설치 의무화(환경부 협업) 및 에너지화 시설 설치 확대, 소·축종별 최적 사육모델 개발(산(안), 26억원) 등으로 메탄가스 감축
 - *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 신규 도입('22년 1개소)
 - 수산업은 연근해 어선 감척('20: 2만여척→'25년까지: 1천여척 추가),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 개발('25) 등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
 -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* 대상 품목 확대('21: 61개 → '30: 전품목)
 - * 인증 현황 : ('12) 60농가/311톤 감축→ ('17) 2,763/25,963→ ('20) 4,700/77,769
- (저투입 정밀농어업) 자원투입 최적화를 위한 정밀농어업 모델을 개발하고, 온실·축산·수산·노지 스마트 거점단지를 통해 고도화·확산
 - * 스마트팜 현황 : ('20) 시설원예 5,985ha/축산 3,463호→ ('22p) 7,000/5,750
 - 품목별 최적 투입 처방 모델 개발, 지능형 농기계 등 데이터·첨단기술 융복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중장기 R&D 추진
 - *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(농식품부·농진청·과기부, '21~'27, 3,867억원)
 - *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('22~'24, '22년 122억원)
 - 스마트팜 혁신밸리('22년 4개소), 노지작물·축·수산 스마트 단지, 무인·자동화 농업 생산단지 등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조성
- (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) 농업분야의 화석연료 사용 감축
 -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에 확대('19: 849ha→ '30: 1,196)
 - 전기용 농기계 개발 R&D('22), 농기계임대사업소 우선 보급*, '13년 이전 공급 노후 농기계 32천대 조기 폐차('25년까지)
 - * 전기용 농기계 보급계획 : ('30) 5,000대→ ('40) 15,000→ ('50) 25,000

[3] 먹거리 접근성 보장

[주요 지표]

주요 세부 과제별 현재 상황		미래 모습	
지 표	'20년	'21년	'25년
■ 소득 1·5분위 식품안전성 확보 격차	11.4%p('18)	-	7.0%p('30)
■ 나트륨 1일 섭취량	3,274mg('18)	3,219mg	3,000mg
■ 농약·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 대상 품목	농산물	농산물	축산물·수산물('24) * 축산물은 소·돼지·닭·우유·달걀, 수산물은 어류부터 도입
■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	관세청·농식품부	관세청·농식품부	농식품부 일원화(20개품목)

* 식품안전성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의 식품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
 ※ 향후 목표물량 등은 시장상황·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

[추진 전략]

- F4 계층별 영양·건강 불균형을 개선*하고, 최소한의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강화
 -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는 금년 하반기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, '22년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
 - * ① 불규칙한 식생활 개선, 영양 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, 비만의 사회적 비용 13.9조원('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),
 ② 소득수준별 유병률(상·하, '19년) : 비만(31.8%→35.6), 고혈압(26.4%→30.9), 당뇨(11.4%→11.7)
- F5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해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, 공공급식 대상별 위생·영양관리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유도

- (영유아) 유치원 영양·식생활교육 실시 및 급식관리,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(230개소, 식약처)
 - (학 생) 학교 영양·식생활교육 실시 및 급식관리(교육부), 급식 공급업체 등록시설 점검, 학교 주변 판매업소 관리(식약처)
 - (노 인) 노인 유형별 영양관리 프로그램 도입(식약처)
- F6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축산물·수산물로 농약·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를 확대 시행('24)하고, 수입농식품 이력관리 업무*를 농식품부로 일원화('22)
 - * 현재 수입농식품 통관 단계 관리,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에서 담당, 수입 수산물은 '20년부터 해수부에서 일관 관리 중

3-① 사회적 약자 먹거리 지원

- (먹거리 통합지원)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바우처에 대해 지원 대상, 지원 품목 확대 등을 위한 본사업 계획 수립('21년 하반기)

- 본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('22) 등 사전절차 추진

* 지원 대상: (시범사업) '20년 1.8만 가구(연간 1인당 48만원), 4개 지역→ '21년 2.8만 가구, 9개 지역→ (예비타당성조사) 200만 가구(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)

농식품 지원사업 현황

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사업			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사업		
사업명	대상	지원	사업명	대상	지원
농식품바우처 <small>시범사업</small>	중위소득 50% 이하	국산채소 과일 등 구매카드	과일간식 <small>시범사업</small>	초등 돌봄교실 학생	주 1회 과일간식
우유급식	저소득층, 한부모가족 등	우유 무상급식	친환경꾸러미 <small>시범사업</small>	임산부	친환경농산물 꾸러미
양곡할인	저소득층, 한부모가족 등	정부양곡 할인(최대 92%)			

- 농식품바우처 지원 품목* 및 사용 가능 매장 확대** 등 운영방식 개선

* (현행) 국내산 과일·채소·우유·계란 등→ (추가) 육류·잡곡 등

** (현행) 농협 하나로마트, 로컬푸드 직매장, 농협몰→ (추가) 대형마트, 중소형 소매점 등

- (맞춤형 지원)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공급,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계층별 맞춤형 먹거리 지원

- (임산부) 미래세대 건강 증진을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월 1회 이상 공급('21: 8만명)

- (초등학생)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학생대상 과일간식 지원('21년 초등돌봄교실 시범사업 24만명, 연30회/인)

- (영양플러스) 영양·건강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보충식품 제공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(복지부)

* 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의 영유아(만 6세 미만) 및 임산부는 영양 위험요인(빈혈, 신체계측, 영양불량)을 평가하여 영양 보충식품 등 지원

3-② 먹거리를 통한 국민 영양·건강 개선

- (식생활 교육)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,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농업·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제고

-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형성을 위해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추진

* 학생 영양·식생활 교육 강화(교육부),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 대상 텃밭 교육, 군장병·고령자 대상 식생활·건강 개선 교육 등

- 식생활 교육·체험과 함께 농업·농촌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발굴·활용('20: 291개소 → '25: 330)

- (공공급식) 친환경·GAP 농산물 사용, 식중독 예방 등 위생·안전 관리를 강화하고, 급식 대상별 영양 관리 추진(교육부·식약처)

- (위생·안전)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를 통한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강화

- (대상별 영양 관리) △영유아: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(230개소)를 통한 위생·영양관리 강화, △학생: 학교 주변 고열량·저영양 식품 판매 제한, △노인: 유형별 영양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 추진(식약처)

- (영양정보 DB 구축) 부처별로 각각 생산·제공되던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하여 통합 제공*함으로써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·편리성 제고

*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농식품부(농·축산물 등), 식약처(가공식품·외식), 해양수산부(수산물) 식품영양정보 통합 제공하여 학교급식 시스템(교육부) 등에 활용

- 식품영양정보 DB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*하고, 급식 식단 개발 및 영양관리, 식품 영양성분 표시, 영양성분 강화 식품 개발 등에 활용

* 식품영양정보 DB(식품수) : ('21) 52,392건 → ('22) 64,728 → ('25) 106,000

- (나트륨·당류) 나트륨은 현 섭취량(3,274mg/1일) 수준의 91% 이하, 당류는 1일 열량의 10%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 등 추진

- 소비가 증가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나트륨·당류 함량 조사·공개(식약처)

- 학교급식 나트륨 섭취 목표량 설정 및 영양·식생활 교육(교육부)

3-③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

- (생산 기반) 토양·용수 조사 및 시설 관리 등을 통해 오염 농산물 생산 차단 및 안전한 제조·가공 식품 생산환경 구축
 - 농경지 토양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* 및 관리기준 연구('20~'25), 농업용수 식중독균·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(연 260건) 추진
 - * 일반·취약농경지 토양 중금속 DB 구축: ('20) 1,974건 → ('25) 2,360
 -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*하고, 원헬스 개념의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생산-유통-소비 전 주기 안전관리기술** 개발
 - * 축산물 잔류물질, 미생물, 계란 살충제 검사 등 매년 7만건 이상(~'25)
 - ** 축산물 위해요소 검출추적 및 제어·저감 기술 개발 : ('20) 10건→ ('25) 18
- (위해예방) 축산물·수산물에 대해 '농약·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'를 도입하고, 유통·소비 과정의 위생점검 강화
 - 축산물은 동물용의약(외)품 품목 확대, 품목별 안전사용 기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거쳐 '24년 5개 축종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PLS 적용
 - * (1단계) 소, 돼지, 닭, 젖소(우유), 산란계(달걀)의 동물용의약품('24.1 시행)→ (2단계) 기타 축산물 동물약품과 농약성분까지 확대 도입(부처협의 후 시행)
 - 수산물은 어업현장에 필요한 수산용 의약품을 확대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정비하여 '24년부터 어류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PLS 적용
 - 온라인 식품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검사 강화, 불법식품 유통 감시체계 구축
- (수입농식품) 수입농식품 대상 유통이력관리 및 위생관리 강화
 - 수입농식품 이력관리 업무를 일원화('22)하고, 대상품목도 확대*
 - * (농식품) '20: 9개→ '25: 20, (수산물) '20: 17개→ '25: 25
 - 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('21.6월 '수입식품법' 하위법령 개정·공포) 및 해외제조업체 현지실사, 수입위생평가 등 강화*
 - * 해외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비율 : ('20) 80%→ ('25) 85

[4] 추진 기반

[법적 근거]

- ㉔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·추진을 위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에 관련 규정 신설

[계획 수립]

- ㉕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, 추진 상황,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5년 주기로 보완
 - * 금번 계획은 제1차 계획임을 감안하여 5년 단위 계획(2021~2025)으로 수립
- 중앙정부의 국가 식량 계획은 식량 안보, 먹거리 기본권 등 국가 단위 과제를 다루고, 지역에서 수립하는 식량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
- 지방정부의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 식량 계획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포함
 - * 기 수립한 지역의 경우 국가 식량계획을 감안하여 수정·보완

[추진 체계]

- ㉖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이행상황 점검, 법률 제개정, 관련 사업 예산 지원 등 추진
 - 다부처 연관 과제(복지부, 교육부, 식약처 등)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
 - * 관계부처, 이해관계 단체, 시민사회,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
 - 지자체에서 추진할 과제는 지역별 푸드플랜 수립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 사업은 관계부처에서 지원(차년도 예산, 중기 재정 등 반영)

붙임	과제별 관계부처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연번	추진과제	관계부처
① 식량 안보		
①	위기 대응력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제 협력을 통한 대응력 제고 민간 해외조달 역량 강화	농식품부, 해수부
②	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 확보 밀·콩 산업 육성 원예 작물 안정적 공급 축산물 안정적 공급 수산물 안정적 공급 농지 유지 및 활용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어업 인력 육성	
③	지역내 생산·소비 체계 구축 지역 푸드플랜 확대 지역내 생산·소비 연계 지역 중소규모 가공식품산업 육성	
② 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		
①	탄소 중립 실천 탄소 중립 기반 구축 ICT 기반 저투입 정밀농업 시설원에 에너지 이용구조 개선 농촌재생에너지 확대	농식품부, 해수부, 환경부, 농진청, 산림청
②	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기후변화 영향 정보 제공 기후변화 적응 생산 강화 농업용수·토양 관리	
③	환경친화적 농축수산업 확대 친환경 농어업 육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	농식품부, 해수부, 환경부
③ 먹거리 접근성 보장		
①	사회적 약자 먹거리 지원 먹거리 통합 지원	농식품부, 교육부 복지부, 식약처
②	먹거리를 통한 국민 건강·영양 개선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공공급식 개선 나트륨·당류 저감화	
③	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PLS 정착·확대 농경지, 용수 등 재배환경 관리 수입 농식품 관리 강화	농식품부, 해수부, 식약처, 농진청